

0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 언론의 난민 보도를 통해 본 '혐오와 배제의 정치학'

전홍기혜 프레시안 기자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은 2016년 보고서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가 0%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며,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4만4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난민 인정자는 839명으로 난민 인정률은 4.1%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38% 수준이다.¹⁾

이처럼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도 기여도 없었던 한국은 2018년 상반기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를 찾게 되자, '혐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정치적 언설이 대중들을 지배하게 됐다. 난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역대 최대 인원인 70여만 명이 참석하고, '난민 반대' 집회가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로 열리는(주최 측 추산 1,000여 명 참

석) 등 뚜렷한 정치적 흐름으로 이어졌다.

'난민=침입자=혐오'로 이어지는 논리 체계를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보수적 종교-정치-언론의 공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난민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여성'은 민족주의를 동원하기 위해 대상화된 존재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위에서 설명한 '혐오와 배제의 정치학'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84명 중 2명 난민 인정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2018년 12월 14일, 제주를 찾은 500여 명의 예멘 난민 중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난

1) 경향신문, 2018.6.30., "유엔난민협약 가입한 한국 '책임분담률 0%' 손 놓고 있지만 혐오 정서는 더욱 커져"

민 신청을 한 484명에 대해 3차례 심사를 거쳐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단순 불인정 됐다. 난민 신청을 한 이들 중 0.4%만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전직 언론인 출신이며 후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실제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해 예멘 난민들은 “슬프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난민으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의 심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특히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²⁾

하지만, 일부 언론은 단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결과를 놓고도 “파장이 예상된다”며 논란을 부추겼다. <연합뉴스>는 12월 14일 “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 파장...난민수용 두고 논란 커질 듯”³⁾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올해 제주에 입국,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가 무사증(무비자) 지역인 데다 국제 관광지로서 항공·해상 교통 접근성이 좋아 난민신청이 반복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난민법이 시행되는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많은 난민신청자가 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썼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주행 직항기를 이용한 예멘 난민 입국이 급증하자, 제주출입국청은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4월 26일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에 대해 출도제한(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을 내렸다. 이미 예멘 난민들의 유입과 이동을 제한하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은 상태다. 따라서 올 상반기처럼 제주도에 난민들이 몰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도 0.4%에 불과한 난민 인정의 결과로 엄청난 숫자의 난민이 몰려들 것처럼 보도한 것은 과장과 왜곡이다. 난민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전형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가짜 난민론’의 확산기, 언론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할 때부터 계속 됐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중편) 등 보수 언론들은 ‘가짜 난민론’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채널A는 “가짜 난민 수수료 500만 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난민 신청을 악용한 불법 체류 방법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난민 신청 제도가 불법

2) 프레시안, 2018. 12. 14., “국가인권위원장 ‘난민 불인정 56명 신변에 깊은 우려’”

3) 연합뉴스, 2018. 12. 14, “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 파장...난민수용 두고 논란 커질 듯”

체류자들과 브로커의 돈벌이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⁴⁾ 채널A는 같은 날 "체류 심사하다 브로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난민 브로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한 뒤, "불법 체류자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과 관광을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 신청을 금지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진짜 난민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가짜 난민부터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MBN '김주하의 뉴스초점'에서 김주하 앵커는 제주 난민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걸러낼지, 또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이 불안한 일자리와 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말입니다"라고 논평했다.⁶⁾

세계일보의 "사실상 '가짜 난민' 판명... '출도제한 해제' 새 쟁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예멘 난민을 '가짜 난민'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의해 '가짜 난민'으로 판명난 이들이 즉각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들은 이의 신청, 소송 등을 통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 이의신청, 소송 등을 반복하며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난민신청자들의 수용률은 약 86.5%에 이른다"고 보도했다.⁷⁾

사례로 든 몇 가지 보도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언론에서 '가짜 난민'이라는 용어를 무

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가짜 난민'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한다는 이분법을 전제로 하며, 자연스럽게 '진짜 난민'이 아닌 '가짜 난민'은 범죄자라는 인식을 불러온다. '나',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자인 '난민'을 배척하는 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용어가 '가짜 난민'이다. 그런 점에서 이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가짜 난민'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난민불인정자'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⁸⁾

자유한국당 의원의 '묻지마 가짜 난민론'

'가짜 난민론'은 정치권을 통해서도 공공연하게 유포됐다.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2월 14일 성명을 내고 414명의 예멘인이 1년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온갖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법으로 찾아온 가짜 난민들을 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살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⁹⁾

이는 조 의원만의 주장이 아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7일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 폐지 토론회'를 개

4) 채널A, 2018.7.11., "가짜 난민 수수료 500만 원"

5) 채널A, 2018.7.11., "체류 심사하다 브로커?"

6) MBN, 2018.6.20., "김주하의 뉴스초점"

7) 세계일보, 2018.9.14., "사실상 '가짜 난민' 판명... '출도제한 해제' 새 쟁점"

8) 제주의 소리, 2018.8.31., "'가짜' 프레임에 갇힌 예멘난민... 혐오 감정 부추긴 언론"

9) 조경태 의원 보도자료, 2018. 12. 14, "예멘 가짜난민 관련 기자회견 -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다!"

최했고, 여기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¹⁰⁾ 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지난 7월 11일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태 의원은 “전 세계 좌파들이 이슬람 난민으로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으로 난민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들들도 장가를 못 가는데 저들은 우리 딸들을 데리고 살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¹⁾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이 난무한 이 토론회에는 같은 당 정진석·원유철·전희경·유기준·심재철·이주영 의원도 참석했다.

실제로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7월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및 난민브로커가 증가하고,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불법행위 및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¹²⁾ 이는 현행 난민법이 난민 불인정 사유를 너무 좁게 제한하여 가짜 난민들을 걸러낼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 사유를 늘리고, 난민 심사 기간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축소해 불법 취업 가능성을 줄이도록 개정한 안이다.

‘가짜 난민론’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

이처럼 보수 정치인과 언론의 공조를 통해 공론

의 장에 오른 ‘가짜 난민론’의 뿌리를 찾아가보면, 든든한 지원 세력으로서 보수 기독교 집단을 만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김진태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도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이들은 ‘난민=무슬림’으로 간주하며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을 죽인다”고 종교적 갈등을 부추기며 제주의 예멘 난민들을 추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홍지수 작가([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저자)는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공존할 수 없다”며 “온건한 무슬림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슬람과 타협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레바논 출신인 미국의 보수 활동가 브리짓 가브리엘을 언급하며, 무슬림 난민들이 레바논에 들어와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사회를 파괴했다는 그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¹³⁾ 가브리엘의 주장을 인용하는 기독교인들은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 500여 명을 받아 주면, 이들이 결국에는 한국을 이슬람화할 것”이라며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난민의 얼굴을 하고 들어와 있으며, 이 사람들이 결국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기독교 세력이 난민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주체라는 점이다. <한겨레>는 “2007년 만들어진 기독교 우파 운동단체 ‘에스더 기도 운동’이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입국한 이후 난민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퍼트린 가짜 뉴스는 ‘스웨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92%가 이슬람 난민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 절반이 아랍이다’, ‘아프간 이민자의

10) 뉴스1, 2018. 9. 7.,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11) 세계일보, 2018.7.12., “김진태 ‘전 세계 좌파들이 이슬람 난민으로 질서 흔들다’”

12) 국민일보, 2018.7.20., “송석준 의원, 난민법 개정 대표 발의”

13) 뉴스앤조이, 2018.7.12., “혐오와 가짜 뉴스로 얼룩진 난민법 개정 토론회”

14) 뉴스앤조이, 2018. 6. 26., “레바논은 정말 난민 때문에 이슬람 국가가 됐냐”

성범죄율이 내국인보다 79배가 높다', '시리아 난민이 동물원에서 조랑말을 강간했다' 등 난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들이었다.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이용희 교수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 기도 운동'은 7,000명 가량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디어 선교'라는 명분으로 청년 수십명을 '풀타임 인터넷 전사'로 명명하고 가짜뉴스를 배포했다. 이들은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 성소수자와 난민 혐오, 북한 관련 안보 위기 강조, 문재인·박원순 등 특정 정치인 비판 등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고 한다.¹⁵⁾

극우적 성향의 기독교 세력을 포함한 보수세력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정치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11월 21일 열린 '가짜 뉴스와 기독교' 토론회에서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민연금이나 쌀값 문제 등 민생·경제와 관련한 이슈들을 왜곡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 같은 가짜 뉴스들은 올바른 민생·경제 정책이나 복지 대책을 수립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까지 왜곡·악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¹⁶⁾ 2017년 대선 당시 보수적 기독교계는 각당 후보들에게 동성애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종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난민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데 동원되는 '여성'

'가짜' 프레임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 예멘 난민들에 대한 '공포'는 제주도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고조됐다. 지난 7월 말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이 실종됐는데, SNS 등에서 예멘 난민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다수의 누리꾼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편의점에서 실종된 여성 앞에서)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예멘 난민 같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고, 급기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예멘 난민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¹⁷⁾

최종 경찰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실족사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 부검 결과 결박이나 목 졸림 등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처(생존 반응)가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아 타살을 의심할 외상이 없고, 성범죄 피해 흔적도 없었다.¹⁸⁾ 그러나 SNS 등을 통해 '난민 범죄'를 의심하는 '가짜 뉴스'가 겹잡을 수 없이 번졌다. 대표적인 것이 '올여름 제주에서 여성 번사 사건이 6건이나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였다. 이 게시물에 실린 내용(6건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5건, 1건은 중복 게재) 중 2건은 허위 사실이며, 나머지 3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모두 타살이라고 보기엔 힘든 사건이었다.¹⁹⁾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주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여론은 이전에도 있었고, 주로 '조선족'이 범

15) 한겨레, 2018. 9. 27,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 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16) 뉴스앤조이, 2018.11.22, "기독교발 가짜 뉴스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다"

17) 서울경제, 2018. 7.30., "제주도 실종사건, '예멘 난민 범죄 가능성' 청와대 국민청원글 등장"

18) 디지털타임즈, 2018.8.21., "제주 세화포구 실종 여성, 국과수 2차 부검 결과 '익사' 결론"

19) 제민일보, 2018. 8.8., "여성 사망 사건 이후 괴소문 확산"

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직후에도 ‘범인이 조선족이다’, ‘범인의 부모가 조선족이다’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이런 인식은 근거가 없는 ‘외국인 혐오’ 내지는 ‘인종주의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18만 명(불법체류자 제외)으로 전체 인구의 4.1%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게는 1.3%에서 많게는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로 따져보면, 내국인 검거인원 지수는 3,495명으로 외국인(1,735명)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²⁰⁾ 이주자(외국인)이 범죄율이 더 높고 강력 범죄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면 원인을 난민, 이주노동자 등 외부의 타자에게 돌리며 이들을 배척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런 정치적 언설 속에서 여성은 범죄의 피해자이며,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부각되지만, 실제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절대 다수는 내국인(한국인) 남성이다.

“난민들을 향한 혐오의 말들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 무엇을 해야 하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사이 난민들을

향한 혐오의 말들이 그 자리를 지배했다.”²¹⁾

인권위는 지난 11월 예멘 난민들을 둘러싼 논란을 비롯한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12월 15일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예멘 난민 사건과 관련해 한국 언론보도에서 가장 부족했던 지점은 ‘이들이 어쩌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도망쳐 멀고 먼 한국까지 오게 됐는가’라는 난민들 입장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2015년 발발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예멘 내전’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저 ‘우리 땅’을 침범해온 ‘이방인’들의 존재에 당혹스러워하고, 낯선 이들에 대한 ‘불편함’과 ‘차이’의 감정을 부풀려 ‘공포’와 ‘혐오’, 궁극적으로는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 정치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무비판적으로 중계하는데 그쳤다.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제되지 못한 허위 정보들이 범람하고 개개인이 미디어 소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산자이자 유통자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됐다. 공론의 장에서 ‘언론’의 영향력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검증된 정보 제공자로서의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제주의 예멘 난민들의 존재는 2018년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척도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빠른 경제성장은 이룩했지만, 그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21) 한겨레, 2018.11.8, “인권위 ‘예멘 난민, 정부가 메시지 전달 못하는 사이 혐오 발언 지배’”

에 걸맞은 민주적 사고나 인권 의식은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매우 격렬한 수준으로 '나'와 다른 '타자'를 가르고,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메커니즘에서 안전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혐오와 배제'의 대상은 난민, 이주자, 성소수자, 여성, 노인 등 얼마든지 확장, 변주가 가능하다.